

보 도 자 료

□ 인력·시설물 관리·매뉴얼 등 상하수도 운영 체계 재정비

- 설계·착공감리·준공·사후관리까지 챙긴다 . . .
- 3단계 「점검→확인→평가」 3단계 시스템으로 경영 혁신 -

 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18. 4. 24.(화) 10:00 배포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상하수도본부	보도자료 PRESS RELEASE	상하수도본부장	강창석	☎ 750-7700
		하수도부장	이학승	☎ 750-7940
		하수계획과장	강학찬	☎ 750-7950
동영상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(웹하드)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후속 자료 : 없음

인력·시설물 관리·메뉴얼 등 상하수도 운영 체계 재정비

- 설계·착공감리·준공·사후관리까지 챙긴다...
 3단계 「점검→확인→평가」 3단계 시스템으로 경영 혁신 -

- 제주도가 상하수도 관리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.
 제주특별자치도는 故 부경욱 주무관 사망 사건을 교훈삼아 하수 펌프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·인원, 공사 및 사후 관리, 시설 유지관리 지침 제·개정 등 상하수도 업무 체계의 경영 혁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.
- 도는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장 등 고도의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민간 전문업체에 관리 위탁하고, 모든 시설 공사 및 사후 관리는 점검→확인→평가의 과정을 거친다.
 - 현재 도내 상수도 시설은 정수장, 가압장, 배수지 등 313개소이며 하수 시설은 하수처리장, 중계펌프장, 간이펌프장 등 485개소이다.
 - 이는 타 광역시와 비교해 예산 규모, 관리 범위, 시설 등이 광범위한 실정이다. 이에 상하수도본부 조직재진단을 통해 중·단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.
- 우선 올해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다.
 - 또한 2019년에는 하수처리장 1개소, 중계펌프장 1개 지역을 시범 위탁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8개 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. 더불어 장기적인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환경공단 설립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.
 - ※ 하수처리장 관리 : 전국 587개 중 공기업 민간위탁 85% (제주도 : 직영)
 - 조직도 재편한다. 상수도 분야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

‘수질관리과’를 신설하며, 하수도 분야는 관리 범위가 광범위한 제주와 서귀포 하수운영과의 조직 확대를 추진 중이다.

□ 시설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공사 및 사후 관리 3단계 시스템을 적용하며, 밀폐공간 등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.

○ 그 동안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해 교육, 훈련 등을 실시했지만 현장에서는 관습적으로 안전 수칙을 미 이행하는 사례가 존재했다.

○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 시행자는 안전수칙 및 안전 관리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·제출해야 하며 도에서는 이를 점검-확인-평가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.

- 점검 : 공사감독자(주무관, 담당 등)가 점검하고,
- 확인 : 담당(계장)은 이행 여부를 확인(서면 및 현장 확인)한 후,
- 평가 : 부서책임자(과장, 부장)가 제반사항을 평가하여 시행

○ 더불어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, 펌프장, 밀폐공간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위험 경고판을 부착하고 가스농도 측정기, 인양장비 등을 보강하는 한편, 정기적인 가스 측정 등 관리도 강화한다.

○ 일반 상하수도 기계·전기시설 등 특수 분야에서는 안전관리비를 확보해 용역을 추진하고, 2천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.

○ 또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등과 협조해 사업시행자와 관리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고, 근로개선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 없는 공사장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.

□ 제주도는 이달 내로 상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설계, 착공, 감리, 준공, 사후관리까지 분야별 지침을 마련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.

○ 이와 함께 범도민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해 도민과 함께 안전한 도시를 이루어 나가는데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.

□ 또한, 유족(배우자)에 대한 취업(보육교사, 공무원 등) 지원, 국가유공자 순직 추진 등 각종 행정절차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.